

# ICI

## 정보통신 산업동향

2013. 4

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업무보고내용 등







# 정보통신산업동향

##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업무보고내용 등

정리 - 기획관리실 안 철 모 (acm@kici.re.kr)

### | 목 차 |

---

#### 요약문

- [동향 1] 2013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업무보고내용(발취) ①  
(2013. 4. 18)
- [동향 2] 2013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내용(발취) ⑪  
(2013. 4. 4)



## 인 사 말



안녕하십니까?

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 함정기입니다.

연구원에서 발간하는 「정보통신산업동향」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·분석하여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.

이번에 발행하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을 포함한 ICT산업전반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업무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으로써 「박근혜정부」의 향후 5년간의 ICT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여러분의 경영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또한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내용 역시 향후 5년간의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건설계획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회원여러분의 수주계획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업, 나아가 ICT산업 전반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,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회원여러분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.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3년 4월

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 함 정 기



## 요 약 문

### □ 발간배경

-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내용은 「박근혜 정부」 5년간의 ICT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
-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내용 역시 향후 5년간의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건설계획의 바로미터가 됨으로써 업계의 수주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

### □ 미래창조과학부 주요업무보고 내용

- 「국가정보화를 통한 ICT 新 수요 창출」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ICT 기반의 지능형 생활안전망 구축 등 추진(p.3)
- 「세계 최고의 인프라 구축」을 위해 통신 3사의 최신인프라구축 및 상용화 유도, 공공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,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개발,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마트 IT환경 시범구축 등 추진(pp.5~6)

### □ 국토교통부 주요업무보고 내용

- 세종시, 혁신도시, 새만금, 제주국제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(pp.14~15)
-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, 첨단 도로안전체계(C-ITS)도입, 홍수 예·경보 시스템 강화, CCTV관제·교통·시설관리 등을 U-City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(매년 5~10개 지자체의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구축) 등 추진(pp.20~23)
- 재해예방 등을 위해 전선 공동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선지중화 추진(p.23)
-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, 서울7호선 연장구간 착공('14 상반기), 자기부상열차, 무가선트램 등 차세대 교통수단 개발(p.24)





# 2013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업무보고내용(발췌) (2013. 4. 18)

## I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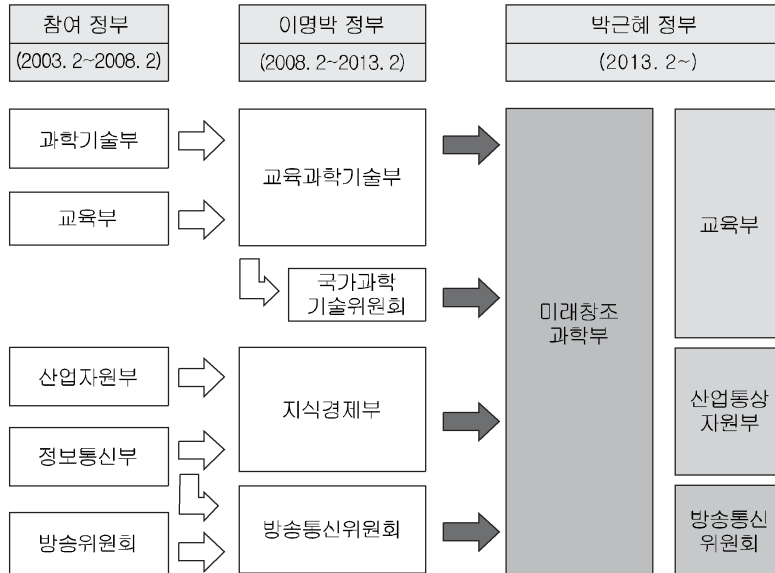
□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정과제(ICT분야)

전 략	국 정 과 제
창조경제 생태계 조성	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
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	정보통신 최강국 건설
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	통신비 부담 낮추기

□ 2013 미래창조과학부 비전 및 전략



□ 과학기술 및 ICT전담부처 및 과학기술 전담부처 변천과정



## II. 중점 추진과제(ICT분야)

### 1.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

#### 가. 인터넷 신산업 육성

- (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) 사물인터넷 기술의 산업현장 및 일상 생활적용을 통하여 기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편익제고
  - 홈/가전, 교통/물류, 헬스케어 등 주요산업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 발굴

#### 나. 국가정보화를 통한 ICT 新 수요 창출

- (사회 각 분야에 ICT 적용·확산) ICT를 재난, 기상, 교육, 관광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·확산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,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



- 제공 등 ICT수요기반과 신시장 창출
- 어린이, 여성 등 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치정보, M2M 등 ICT기반의 지능형 생활안전망 구축('13년 18억원)
-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구축('13년 10억원) 및 증강현실·스마트폰을 이용한 관광서비스('13년 6억원) 등 수요자 맞춤형 선도과제에 ICT 적용
- (전통시장 등에 ICT 적용) 전통시장, 전통산업, 중소기업 등 ICT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ICT를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전통시장에 ICT를 활용해 실적관리, 상권분석, 전자쿠폰 발행 등 매장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(사례: 중국 제일시장-SKT)
- 농업에 ICT를 접목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작업관리 정보화, 기상경작,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농업경영의 효율화 지원
- (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) 향후 5년간의 新 정보화 비전 및 청사진을 담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(2013년~2017년) 수립('13년 9월)
- 국가사회전반에 ICT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, ICT산업의 수요기반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·창조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

## 2. SW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

### 가. 21세기 언어인 SW를 핵심산업으로 육성

- (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SW 제값주기 선도)
-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모니터링 강화
- 상용SW 대외홍보 및 사용자 인식개선을 통해 상용 SW구매 활성화
- 국내 SW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역량 확충
- 대·중소기업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SW 공정거래 기반 구축
- (개방형 창의혁신 R&D 등을 통한 SW경쟁력 확보)
- 학생·일반이 참여하는 개방형 R&D, 다수 참여방식의 성과경쟁 R&D 등

창의 아이디어 R&D 연계프로그램 확대

-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도전적·혁신적 상용 SW기술개발의 지속 지원 추진
- (SW창업활성 및 글로벌 시장 개척)
  - 창업기업 보유 우수창업 아이템을 기술·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상용화 추진('13년 5억원), 중소SW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, IT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
- (SW융합 클러스터 조성)
  - SW수요·공급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「SW융합 클러스터」 생태계 조성, 지역SW산업에 대한 One Stop서비스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

나. 누구나 SW를 개발·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

- 초·중등 SW교육강화를 통한 창의적인 SW인재 조기발굴·육성, 공개SW온라인교육서비스 및 SW교육 오픈마켓 활성화, SW개발자 공모전 확대 등

다. 한국 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

- 방송통신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(4,000억원, 기재부 협의), 대중소 콘텐츠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('13년 연중) 등

라.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 육성

-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체간 칸막이식 규제 개선(방송법·IPTV법 일원화 추진('13. 12), 양방향 콘텐츠 제작지원 및 N-스크린 관련 공통기술 표준화,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전략 수립·추진

\* 스마트광고: 스마트미디어(스마트TV, 스마트폰 등) 및 IPTV(VOD)기반의 맞춤형·양방향 광고

마.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

- (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-Giga 인터넷 전국 보급) Giga인터넷확산을 위해 최신인프라구축 및 상용화 유도



- '17년 Giga인터넷 전국보급 90% 달성을 위해 통신 3사(KT, LGU+, SKB) 상용화 유도 및 지능형 백본망 검증 추진('13년 48억원)
- '13년 기술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'14년부터 시범서비스 추진
- '17년까지 소규모 농어촌지역역에 IPTV,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('13년 176억원)
- (공공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)
  - 공공장소에 통신사간 Wi-Fi 공동구축 활용을 통해 무료서비스 제공 유도 ('13년 1,000개소 이상)
    - \* 관공서 민원실, 도서관, 박물관, 터미널, 기차역 등 '17년까지 4,000개소 이상
  - 서민, 소외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정부, 지자체,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(1:1:2) 하여 공동구축 및 개방 추진('13년 1,022개소, 정부 10억원)
    - \* 전통시장, 보건소, 복지시설등 '15년까지 6,000개소 이상('13~'15년 정부 169억 원)
- (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)
  - 1Gbps급 무선인터넷 기술개발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 스마트 IT환경 시범구축 추진('17년까지 1,045억원)
- (스마트융합환경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자원 제공)
  - LTE 추가 주파수 공급, 중장기 주파수 계획인 '모바일 광개토 플랜 2.0' 마련 등

### 3.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

#### 가.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

- (알뜰폰 서비스-MVNO를 통한 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)
  - 유통업체 등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 활성화 촉진
    - \* 알뜰폰(MVNO: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): 기존 이동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이동사보다 요금이 20~30% 저렴
  - 현재 2G·3G의 음성, 데이터, 문자로 한정되어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

스를 LTE 및 부가서비스로 확대('13. 6월)

- (통신비 부담 경감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)
  - '13~'15년말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유도
    - \* 이동전화 가입비(평균 3만원)를 '13년 40%, '14년 30%, '15년 30% 인하 유도
  - 음성·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하는 선택형 요금제, 노인·청소년·장애인 맞춤형 요금제 확대,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
  - 고액요금제(5만 4천원 이상)에서 이용가능한 무선인터넷전화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음성통화부담 경감
- (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)
  -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, 단말기 유통경쟁기반 강화, 다양한 단말기 출시 유도 등을 통해 가격인하 유도 추진

#### 나. 사이버 보안 강화

- (기업정보보호 안전망 구축) 방송, 금융, 정수, 교통, 의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보안 강화시설로 지정
  -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추진('14년)
  - 기업의 정보자산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대상을 전 사업분야로 확대('12년 150개 기관 → '17년 500개 기관) 및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추진('14년)
- (국가 사이버 예방·대응체계 구축)
  - 민간분야 악성코드분석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유관기관(군·공공) 수준으로 증원(현재 65명 → '17년 300명), 침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·운영('14~'17년)
  - 지능형 지속공격 인지, 추적기술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보안기술 개발('14~'17년)
  - 사이버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대응팀 구성 및 최신 대응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는 화이트 해커 수준의 고급전문인력 양성
    - \* '17년까지 고급 전문인력 5,000명 양성(정부 1,260명, 민간 3,740명)



다. 글로벌 웹 표준 이용환경 조성

- (주요 웹사이트의 ActiveX 퇴출, 차세대 글로벌 웹표준 확산,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환경 조성 등)

라.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및 정보격차 해소

- (인터넷 중독 대응)
  - 6개 광역지자체(인천, 전남, 경남, 경북, 울산, 세종)에 상담센터 구축('13년~)
  - 향후 중독발생 여부, 중독 수준 등이 예측 가능한 사전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중독 사전예방 강화('14년)
- (사이버 정보윤리 정착)
  - 사이버 불링(왕따)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학생의 사례접수 및 온라인 실시간 상담 실시('14년)
  - 사이버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의 사이버음란물 모니터링단 운영('13년~)
- (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)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·실태조사 실시,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
- (공평한 정보접근 이용환경 조성)
  - 시각·청각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('13년 4천대)
  - 장애인·고령층 등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그린PC 및 스마트기기 무료보급('13년 29억 원, 15천 대)
  - 장애인의 웹·앱에 대한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정보접근성 개선교육·컨설팅, 실태조사('13년 600개 사이트) 추진
- (정보소외계층 정보활용능력 강화)
  - 장애인·고령층·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
  -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('13년 10종) 보급, 온라인 정보화교육 실시('13년 16억원, 10만명/年) 등을 통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기반 마련

마. 창조경제·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

- (우체국 쇼핑·물류를 활용한 소상공인·농업인 판로 지원) 모바일용 웹페이지 신규개발로 우체국 쇼핑몰(www.epost.go.kr)의 소상공인과 농산물의 직

거래 판로 지원

- (다양한 공공·민간 서비스 제휴를 통한 우체국의 새로운 역할 수행)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한 국가행정 서비스 역할 수행, 알뜰폰 수탁판매 추진
- (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한 창조기업의 성장 지원)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우체국 금융자금의 벤처기업 투자 조성액을 500억 원 증액(현재 1,050억 원)
- (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배원 증원 적극 검토) 우체국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통한 수입으로 신도시 집배원 인력증원, 비정규 집배원 정규직화 등 추진

### III. 부처간 협업과제(ICT분야)

#### 1.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

- (필요성) 방송법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관장하게 됨에 따라 방송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간 합의 필요
  - \* 유료방송의 허가·변경허가·재허가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필요
- (협력사항) 방송사업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및 유료방송법체계일원화 방안마련을 위해 방통위와 함께 ‘법체계 일원화 연구반’을 구성·운영

#### 2. IT·SW융합 촉진 및 확산

- (필요성) IT·SW를 제조업·농업·국방·교육·의료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확산사업 추진
- (협력사항) 산업부,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 도메인별 임베디드SW 및 SW 융합 부품 개발, 분야별 융합서비스 확산
  - 미래창조과학부는 IT·SW융합 총괄부서로서 범국가적 사업 기획, SW융합



### 핵심기술개발 및 융합서비스 확산사업 추진

- 관계부처는 분야별 응용기술개발, 개발기술의 보급·확산, 법·제도적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부처간 공동노력 확대

## 3. 범부처 「창조경제 실현계획」 수립·추진

- (필요성)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실현을 위한 「창조경제 실현계획」을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, 범국민적으로 추진
- (협력사항) 「창조경제 실현계획」 수립·추진을 위한 범부처 연계·협력체계 구축,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발굴·추진, 예산 및 금융·조세지원, 법령 제·개정 및 창조경제 성과시스템 도입 등
  -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·조정·점검하고 각 부처는 세부과제 발굴·추진 및 제도·예산 협조

## 4. 분산된 ICT 정책 종합 추진

- (필요성) CPND 생태계를 이루는 ICT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(콘텐츠), 산업통상자원부(임베디드SW)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
- (추진체계)(가칭)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여 ICT산업 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 및 ICT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규정

## 5. 국가 정보화 추진

- (필요성) 국가사회 전분야에 ICT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, ICT산업의 新수요를 창출
- (추진체계) 각 부처의 소관 분야 정보화계획을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각 부처의 정보화계획 종합·조정

## IV. 입법계획(ICT분야)

### 1. 법률제정

법률명	내 용	추진일정
ICT진흥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CT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래 부와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ICT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규정</li> </ul>	의결 (6월)
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(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클라우드서비스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의 신뢰제고 및 활성화 기반조성</li> </ul>	국회제출 (‘13년 하반기) *정부입법
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이버공격 발생시 해당 시스템에의 접근 요청,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조 등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</li> </ul>	국회제출 (‘13년 하반기)

### 2. 법률개정

법률명	내 용	추진일정
방송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법 및 IPTV법상 사업자의 기술결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제도 마련</li> <li>※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병행 추진</li> </ul>	국회제출 (6월)
국가정보화 기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도입</li> </ul>	개정 (11월)



# 2013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내용(발췌) (2013. 4. 4)

## I. 지역균형발전,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

### 1. 국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 추진

#### 가.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

- 재건축·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, 경제·사회·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전환
- (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) '14~'18년간 선도지역 지원 로드맵 마련('13. 6) 선도지역 지정('13. 12)후 계획수립비·기반시설설치비 등 지원

#### 나. 삶의 질 재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

- 국가도시공원, 근린생활권에 생활공원, 공·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'동네 쉼터' 조성
- 공원, 녹지, 방법 등 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,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생활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 유도

#### 다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활력 회복 추진

- 도시규모와 특성,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성장을 견인·확산시킬 수 있는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 마련('13. 12)

## 2. 지역 성장거점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

### 가. 세종도시,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

- (세종시) 생활·문화 인프라 확충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('16), 과학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발전 도모
- (혁신도시)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산·학·연 클러스터구축('13~'16)

### 나. (새만금) 개발청을 설립('13년)하여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

### 다. (제주국제도시) 첨단과학, 교육, 의료, 관광의 복합도시로 발전

\* 첨단과학기술단지, 영어교육도시, 헬스케어타운, 신화·역사 공원 등 활성화

### 라. (낙후지역)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

-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
- 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('13. 4, 연구착수)하고, 해안 및 내륙권에 휴양·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설계 착수('13. 8)

\* (동해안권) 가족체험 중심 휴양·레포츠벨트, (서해안권)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구, (남해안권) 섬자원 특화, (백두대간권)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특성화지대

## 3.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계로 전환

### 가. 개발사업 프로세스 전환

- 개발사업시 先 지역합의 유도, 後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

### 나. 과잉개발 예방

-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, 국토의 수용가능성, 지역 여건 등을 종합평가하는 “개발사업 평가시스템” 도입 검토
- 사업성격이 유사한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제도를 통·폐합하여 유사·중복개발 방지



### 다. 난개발 방지

-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·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('13. 12)
-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차등화하고, 기반시설 확보기준, 환경·경관 기준 등을 구체화·합리화('13. 12)

## II. 좋은 일자리 창출

### 1.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

#### 가.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

- \* (오픈플랫폼) 고해상도항공사진, 수치지형도 등을 바탕으로 정밀 3D 지적도, 용도지역지구도 등 8종의 다양한 정보를 전 국민에게 제공중
- 부동산·교통 등 14개 국가공간정보를 추가 공개('13. 5)하고, 웹기반 제공중인 오픈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('13. 7)

#### 나. 공간정보의 융·복합을 통한 정부 3.0 구현

-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「공간 빅데이터」 구축('14~'17)
- (소상공인 창업지원) 서민과 중소기업을 공간정보기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('13~'14)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창업을 지원

### 2. 건설·교통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

#### 가. 교통 + IT ⇄ 첨단교통산업(ITS)

- \* ITS(Intelligent Transport System): 전자, 정보, 통신,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시스템
- \* 세계 ITS시장규모는 '11년 130억\$ → '15년 186억\$로 성장 전망
- 벤처기업, 개인 등 영세사업자도 교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新 서비스

개발이 가능토록 교통정보 무상 제공(법령개정, 12월)

- ITS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시장분석을 통한 수출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 추진

\* ITS 도입 초기인 동남아, BRICs 국가 등 수출전략국 선정 → 수출지원단 파견('13. 10)

#### 나. 도시 + IT ↔ U-City 산업

- \* U-City: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산업
- 민간업체의 U-서비스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U-City R&D 연구참여 확대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

#### 다. 산업단지 + IT + 문화 ↔ 창조기업 인큐베이터

- 노후산업 재생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

### 3. 해외건설 1천억불 시대 개막

#### 가. 진출시장 및 공종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주기반 확보

-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교섭·발주처 초청 등 초기 진출비용 지원을 확대하  
되,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점협력국 위주 지원

\* 지원대상사업 선정('13. 3)/건당 지원금액 확대(3천→5천만 원 이상)

-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택·신도시·수자원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
  - 정부 주도로 개발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, 금융제공과 연계하여 패키지  
형 인프라 수주 추진('13. 4~)

\* 신도시·수자원 개발사업 등 분야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/대상국 선정(6월) → 대상국 협  
의 및 개발 MOU체결(9월) →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(11월)

- 우리의 개발·건설관리시스템을 전수하여 사업참여기반 마련
- 제7차 세계물포럼('15 대구·경북)의 차질없는 준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 
해외 물시장 진출 기회 확대

#### 나.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

-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금 확대



-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강화('12년 12억 원 → '13년 21억 원)

#### 다.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

-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수주정보제공,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, 인력난 해소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
  - (입찰전)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수주 컨설팅을 강화(담당인력 39 → 50인, '13. 5)하고, 공공기관·대기업과 동반진출 기회 제공
  - (입찰/공사)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확대(1천억 원 → 2천억 원)하고, 전문인력 양성(3천 → 3.5천 명, '13. 3~) 및 중소기업 OJT규모 확대(200명 → 400명, '13. 4~)
- 중소기업에 해외기술코드, 구체적 진출사례 등 기술정보 제공('13. 10), 초기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ENG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

### 4.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

#### 가. 건설ENG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

- 건설ENG분야의 종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·감리·CM 등 칸막이로 분리된 건설ENG영역을 단일화(건기법 개정, '13. 5)
  - \* 감리회사 427개 업체중 319개(74%)가 설계·감리 겸업중('12. 4 기준)
  - 업역별, 발주청별 분리·관리 중인 업체 실적을 국가가 통합관리('13. 6 시범운영)하여 해외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체 실적자료 신뢰성 제고
- 건설기술자·감리원·품질관리자 등 업역별로 구분된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,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기술등급 체계로 개선
  - \* 개선방안 마련('13. 4), 건기법 하위법령 개정('13. 7 입법예고)

#### 나. 건설ENG 업계의 기술력 제고

- 신기술 지정 활성화를 위해 “신기술건설팅센터”를 운영('13. 4)
  - \* 건설신기술 신청건수는 연 50~80건으로 특허의 1/30 수준

- 설계시 수행하는 VE의 시공단계 적용 활성화 및 건설기술 R&D 지원('13년 364억 원) 등을 통해 민간의 기술개발 유도
  - \* (Value Engineering) 가치·기능향상을 위해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설계를 재검토
- 복잡·다양한 51종 설계·시공기준을 코드화하고('13. 8), 설계·시공시 민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중심 기준으로 단계적 전환
  - \* (기준 코드화) 기준을 “공통기준”과 “시설별 기준”으로 구분하고, DB·포털로 통합관리

### III.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#### 1.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

##### 가. 운전습관 개선

- (교육의 질적 개선)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빗길 운전, 안전띠 미착용, 급정거 등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
  - 현재 1개소 운영(경상권)중인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'20년까지 4개소로 확대('13년 수도권 센터(화성) 건립 추진)

##### 나. 위험도로 전면 개선

-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, 결빙 등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하여 인근 차량에 전파하는 첨단 도로안전체계(C-ITS) 도입
  - \* C-ITS 서비스 표준안 마련(5월),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(10월), 시범사업 추진('14)

##### 다. 항공·철도 안전

- (항공) 운항집중시간대 밀착감독과 컨설팅방식의 감독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종합상황통제센터 구축 등으로 선진형 사고예방체계 확립
- (철도) 안전대책추진체계를 보강하여 성과(고장, 사고감소 등)를 조기 달성하고 안전인증체계 개편, 전문자격제도확대('13. 12)로 안전관리 강화
- 주요 교통정보 통신시설 사이버보안 강화('13. 5)



## 2. 도시홍수 방지 기반 마련

### 가. 도시침수 종합대책 추진

-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-저류지-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마련
-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역내 치수시설 간 연계관리, 도시물순환 촉진 등 통합수량 관리체계 법제화(수자원관리법 제정안 마련, '13. 6)

### 나. 홍수 예·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해 예방적 사전 대비 체제로 전환

- 강우레이더를 '16년까지 12기로 확충, 홍수 예·경보 정확도를 제고
- 강우량별 침수예상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홍수위험지도를 '15년까지 전국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제작(총연장 2,332km)

### 다. 부처별로 추진하는 도시방재시스템 연계 강화

-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취약지역 DB를 연계하여 도시방재통합허브를 구축(UPIIS, '13. 12)하고, 지자체와 공유
- CCTV관제, 교통, 시설관리 등을 U-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 - '14~'18년간 매년 5~10개 지자체의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구축
- \* 인천 청라지구, 세종시 등 통합플랫폼 시험결과 1개 지구당 10억 원 비용절감 성과

## 3.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

### 가.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

- 건설현장 추락사고 저감을 위해 가설물 구조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 (건기법 개정안 마련, '13. 5)
- 건설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심사를 전문기관에 전담시키고,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(건기법 개정안 마련, '13. 5)
- 지자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의회(국토부, 고용부, 지자체 등)를 구성('13. 4)하고 관리체계 마련('13. 8)

나.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

- 대형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형 교량, 공동구 등 소규모 생활 시설도 안전점검 대상에 추가(시특법 법제처 제출, '13. 5)
- 시설물 안전진단을 성실히 수행토록 안전진단업체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검증(평가규정 개정, '13. 8)

4. 국민 일상생활 불편 개선

가. 주거생활

- 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아파트 바닥구조기준 강화('13. 5), 친환경자재 의무사용대상 확대(1,000세대 → 500세대이상 단지, '13. 5), 주택성능실험센터 구축('14~'17) 등

나. 환경생활

- 경관을 훼손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(전국 860여동)을 정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('13. 6) 및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비 추진('14년~)
- 재해예방, 보행안전, 경관개선 등을 위해 전선 공동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선지중화 추진
  - \* 전선공동구 특별법('13. 5, 의원발의): 기본계획 수립(10년 단위), 도로관리청이 공동구 설치, 한전 등이 전선 지중화 후 기존 전주 등 철거 등
- 지역별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자체 지원사업 및 컨설팅 지원 추진
-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('13. 12)하고, 한옥의 신규 보급 지원기반 구축(한옥 등 건축자산법, '13. 4 의원발의)



## IV. 출퇴근 교통난 완화

### 1. 대중교통 육성 및 수요관리정책 추진

#### 가. (대중교통 육성) 환승불편 완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

- 문화·상업·업무시설 등을 갖춘 “복합환승센터” 사업 추진
  - \* 동대구역·동래역 사업착공('13. 하), 신규 환승센터 지정('13, 익산역 등 5개)

#### 나. 수요관리정책 병행 추진

- (효율적 주차관리) 주차장설치상한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('13. 10) 및 실시간 주차장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
  - \* 스마트주차시스템 기술현황 및 지자체 수요조사('13. 9)

### 2. 출퇴근 교통망 확충

#### 가.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

-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(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)
- 서울7호선 연장 구간 착공('14. 상, 부평구청~석남), 서울 9호선 2단계 개통('14하, 논현~잠실운동장), 대구3호선 개통('14, 하) 등 적기 추진
- 기존 重 전철 중심에서 탈피하여 자기부상열차, 무가선트램 등 차세대 도시철도 교통수단 개발을 통해 상용화 추진
  - \*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: 인천공항내 시운전('12. 9~)을 거쳐 '13. 9월 개통
  - 무가선트램 : 오송 차량기지내 시험운행('12. 9~)

#### 나. 도시 혼잡도로 개선

- 도로확장·신설 중심에서 병목구간, 대중교통시설 개선등 도심 혼잡해소에 중심을 두는 지·정체 해소 종합대책 마련

### 3. 용산역세권 개발

- 철도공사가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민간투자자와 협약하에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 유지

## V. 건설·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### 1.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

#### 가. 대·중소기업 상생 발전 지원

-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 확대
  - \*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(4~5월), 행정예고·규제심사(6~8월), 고시개정(9월)
-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불리한 건설대가 산정기준은 실태 조사('13. 3~6)를 거쳐 개선('13. 8)
  - \* 예) 실제로 4시간 작업(1일 미만)을 위해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1일치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품셈에서는 4시간만 인정
-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 ENG 분야 하도급 실태를 분석('13. 5~12) 하고 하도급 양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('13. 12)

#### 나.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

-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 부여
- 계약조건(공기연장)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 - \*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(의원입법 '12. 10)
- 원도급자가 저가(낙찰률 82%미만)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



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(방안마련 '13. 6)

-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(건설법 개정안 의원발의 '13. 6)
-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미발급,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·처분하여 하도급업체 보호('13. 4)
  - 건설불공정해소센터(가칭)를 설치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(개정안 마련, '13. 5)
    - \* 현행 불법하도급신고센터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조치
    - \* 건설산업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해소를 위해 기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('13. 4)

#### 다. 건설기능인·장비업자 처우개선

-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기능인(일용직)의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를 개선(개정안 마련, '13. 12)
-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('13. 6)하고,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방안을 마련('13. 12)

#### 라. 공공공사 계약제도 선진화 검토

-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,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저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입·낙찰제도개선(기재부 협의)
  - 운찰제(運札制) 비판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제고
    - \* 기재부는 「최저가낙찰제의 공과 평가 및 개선방안」을 국회 보고 예정('13. 6)
- 예산부족, 민원 등으로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시,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 마련(기재부 협의)

## VI.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

### 1.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

- \* 가격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·공급확대 기초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개입·규제를 완화하고, 세제·금융지원을 통한 시장회복 도모

#### 가. 주택공급물량 조절

- 공공분양물량 공급 축소
  -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연 7만 →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, 60㎡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, 소득심사를 강화
  - \* 기 인허가된 물량을 감안, '13~'17년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호 수준으로 관리
  - 수도권 GB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, 기존 GB지구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
- 기 추진중인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및 민간부문 공급축소 유도
  - 시장수요를 감안, 택지지구·보금자리지구등의 사업계획 조정 추진

#### 나.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

- (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) 부부합산 6천만 원이하 가구가 6억·85㎡이하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(금년말까지),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강화 등
- (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) 9억 이하 신규·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㎡·9억원이하 기존주택 구입시,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액 전액면제(금년말까지)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,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,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추첨제 중심으로 개편 등
- (시중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)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“토지임대부 임대주택”, “주택임대관리업” 신설, “준공공임대주택” 등록 요건 완화(의무임대기간 준수, 임대료 인상률 제한요건 충족시) 등



- (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 강구) 전문가 T/F를 구성하여 구체적 허용범위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건축심의 의무화등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,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후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

## 2. 서민 주거복지 강화: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

### 가.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

- 임대주택은 건설(7만)과 매입·전세방식(4만)을 합하여 연 11만호, 분양주택은 최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 2만호 공급

#### 〈공공주택 공급계획〉

(단위: 만 호)

구분	공공분양	임대계	건설임대	공공임대				매입·전세
				국민	영구	공공임대		
						공공	민간	
연 13만호	2.0	11.0	7.0	3.8	1.0	1.2	1.0	4.0

- 공공건설임대 물량은 외곽(GB, 신도시) 보다는 도심(철도부지, 국공유지 등 활용) 내 입지 가능한 물량을 대폭 확대

### 나. 행복주택 공급계획

- 행복주택은 철도부지, 유휴 국·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·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, 지역 활성화도 도모
- 향후 5년간('13~'17) 총 20만호를 공급(인허가 기준)하고, '13년에는 수도권 도시의 6~8개 지구에 1만호 시범사업(일부는 착공 추진)



본 동향자료는 <http://www.kici.re.kr>에서 볼 수 있습니다.